

지역 간 임금 격차 분석을 통한 지역산업인력 수급 개선 방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김영민** · 정원석***

정부는 지역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지역산업인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므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더 높고, 이러한 특징은 대졸 이상 고학력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지역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지역산업인력정책, 지역산업 인력 수급, 지역 간 임금 격차, 학력별 임금 격차, 지역균형발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I2, J3, J6, L6

I. 서론

디지털전환 및 신기술 출현에 따라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력은 기업의 생산요소 가운데 하나인 노동투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한 기술개발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인

* 본 논문은 산업연구원 보고서 「지역 간 노동시장 성과 분석과 지역산업인력정책 시사점」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제1저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화: (044) 287-3103, E-mail: kym2060@kiet.re.kr

*** 교신저자,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전화: (051) 200-8637, E-mail: wonsuk@dau.ac.kr
논문투고일: 2024. 5. 1 수정일: 2024. 6. 20 게재확정일: 2024. 6. 27

력 채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인력 확보 여부가 생산성 및 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력은 기업의 생산요소 가운데 하나인 노동투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원활한 인력 수급은 노동투입의 유연성을 높이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산업 내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100만 디지털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수행 중이다.

산업 내 원활한 인력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력정책은 지역의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 간 차이, 지역 간 교육훈련 시스템 격차 및 지역 간 인구구조 등의 다양한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산업인력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교육발전특구, 교육개혁 선도지구 지정, 글로벌대학,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의 지역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0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39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40%에 가까운 14조 9,000억 원을 지역인력육성과 관련된 분야에 투입하였다.¹⁾

이러한 지역산업인력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지역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디지털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실행할 고급인력 부족(40.7%)과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49.3%) 등이 비수도권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응답하였다.²⁾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 중 결국 이전하지 못한 기업들이 결국 이전을 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인재 및 우수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꼽았다.³⁾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현재 수행 중인 지역산업인력정책은 양성된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20).

2) 김지수·변창욱·최윤기·배진원·최준석(2021).

3) KOSME 이슈포커스(2021).

인력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산업에 공급되었는지는 의문이 따른다.

사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 개인은 자신의 선호, 임금 및 고용안정성 등 노동시장 성과 및 사업체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강제하여 특정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산업인력 육성을 프로그램 등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지역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지역산업인력정책이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양성된 인력이 지역 노동시장으로 공급될 수 있는 유인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산업인력 수급, 지역 간 인구이동과 임금 등 노동시장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역산업인력정책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A형)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수도권 임금근로자는 비수도권에 비해 임금이 1.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졸자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 간 임금 격차는 5.3%에 달하고,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인력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 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금 및 거주비 지원 등의 경제적 유인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선행연구 및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Ⅲ절에서는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을 설명하였다. 제Ⅳ절에서는 지역 간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제Ⅴ절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및 차별성

지역산업 인력 수급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산업 내 인력 수급을 조사하는 자료상의 한계에 기인한다. 그러나 인력 수급 결정요인 및 지역 간 인구이동 관련 연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내 인력 수급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영민·조재한(2020)은 투자와 같은 산업생산활동 증가는 인력 수급 불균형을 확대하고, 특히 석·박사 이상 고학력 인력 수급 불균형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보였다. 오승환·정성문·박재민(2016)은 기업데이터와 지식경제부 데이터를 결합하여 실증분석을 실행한 연구에서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기술적·재무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기술 수준에서는 중급 이상 고급기술, 학력 수준에서는 대졸 이상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산업기술인력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원규·김진웅(2015)은 기업규모별로 구축한 18개 제조업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산업기술인력 부족률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특히 이상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인건비와 인력 수급 불균형의 관계는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인력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노동시장 성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현우·이두현(202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인구의 순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혀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증가율이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요인이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의 주요한 이유임을 주장하였다. 강은택·마광래(2013)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 밖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들과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여 이들의 경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그룹 간 시간에 따른 소득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었고 자산 수준의 차이는 확대된 것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 수도권으로 이동의 주요 이유라는 것을 보여 준다. 홍성효·유수영(2012)은 연령계층별로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20대의 경우 기대소득 등에 따른 이동이 많았던 반면 80대 이상 노인층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인구이동의 주된 요인이 경제적 이유임을 주장하였다. 김리영·양광식(2013)은 지역을 대도시, 도시, 비도시로 구분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자리 수라고 볼 수 있는 사업체 숫자가 인구이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으며, 생활 여건 측면에서는 대중교통, 주택가격 변동률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현아(2013)는 인구이동의 주요 이

유가 취업 기회의 지역 간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지출 등 공공지출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공공지출 중 인프라 구축의 경우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투입 형태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지역노동시장에 공급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산업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임금 및 거주비 지원 등의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 및 추이를 임금방정식을 통해 추정하고, 지역산업인력정책 시사점을 제안한다. 과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지만 이들 연구는 지역 간 임금 격차 등의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지역 간 임금 격차 및 추이 분석을 통해 지역산업인력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이가 있다. 고용정책과 산업인력정책 모두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고용정책은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숙련을 축적한 인력이 노동시장에 공급된 이후 취업, 임금, 복지, 실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면, 산업인력정책은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기존 산업인력정책은 인력 양성 및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양성된 인력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 및 거주비 지원과 지역대학과 산업 간 연계한 맞춤형 계약학과 설치 필요성 등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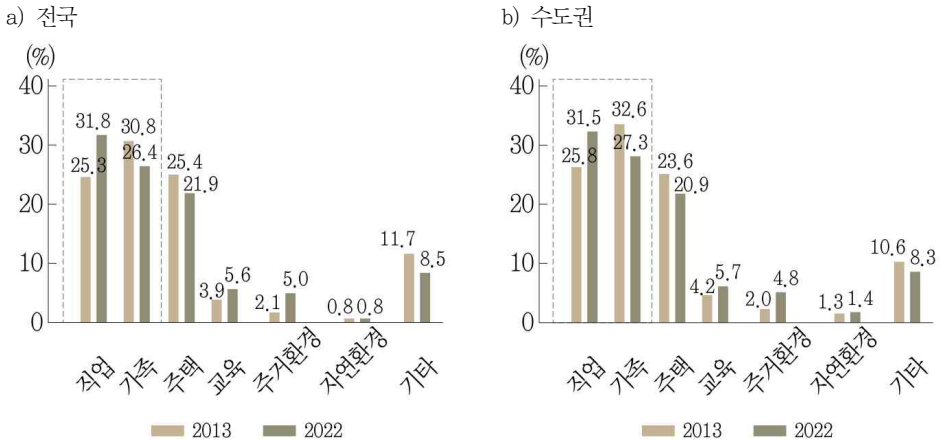
Ⅲ. 지역 간 인력 수급과 노동시장 현황

1. 지역별 산업인력 수급 현황

본 절에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과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되는 지역 간 노동시장의 성과를 살펴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50%를 넘긴 이후 2022년에는 그 비율이 50.5%로 확대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간 인구이동의 주요한 이유는 수도권 지역에 양

〈그림 1〉 시도 간 전입 사유별 1인 인구이동 현황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질의 일자리가 많고 이와 더불어 우수한 생활편의시설(amenity)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⁴⁾(〈그림 1〉 참조). 통계청(2023)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도 간 전입 사유별 이동 이유는 직업이 2013년 25.8%에서 2022년 31.5%로 5.7%포인트, 같은 기간 교육은 4.2%에서 5.7%로 1.5%포인트, 주거환경은 2.0%에서 4.8%로 2.8%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가족으로 인한 시도 전입 비중은 2013년 32.6%에서 27.3%로 5.3%포인트 감소하였다.

특히, 수도권 전입의 주요한 이유로 직업은 2013년 25.3%에서 2022년 31.8%로 6.5%포인트, 동 기간에 교육은 3.9%에서 5.6%로 1.7%포인트 상승, 주거환경은 2.1%에서 5.0%로 2.9%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수도권 전입 가운데 가족을 사유로 든 비중은 2013년 30.8%에서 2022년 26.4%로 4.4%포인트 감소하였다.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은 가속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이는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지난 10여 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순 인구이동⁵⁾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에 비해 유출이 더 많았지만, 2017년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유출에 비해 많아졌으며, 2020년에는 수도권으로 순 인구 유입이 8만 7,77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4) 김현우·이두현(2021), 김리영·양광식(2013), 김현아(2013), 강은택·마광래(2012), 홍성호·유수형(2012).

5) 순 인구이동=인구 유입-인구 유출

〈그림 2〉 수도권 순 인구이동 추이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수도권으로 순 인구이동은 2013년 4만 7,059명에서 2020년 8만 9,841명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7만 2,088명으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렇게 청년층의 수도권 순 인구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국내인구 이동통계에서 살펴본 대로 수도권의 일자리 및 교육 기회 등이 비수도권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⁶⁾

2. 지역별 노동시장 현황

본 절에서는 지역 간 주거 및 생활편의 시설 차이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구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A형)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다. 지역별고용조사(A형)는 지역 근로자의 임금근로자 여부, 상용직 비율, 시간당 임금 등 노동시장 현황을 제공하므로 지역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자료이다. 분석 대상은 만 15세 이상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이고, 분석 시기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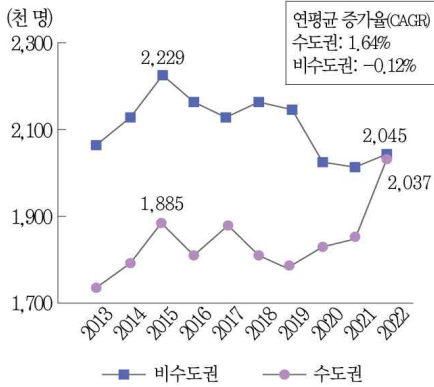
자료를 활용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임금근로자와

6) 김현우·이두현(2021), 이찬영·문제철(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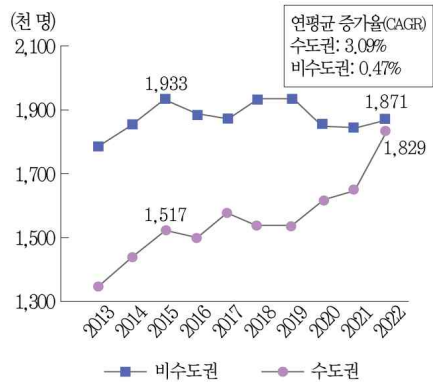
7)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A형)는 2008년부터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와 표준직업분류(7차 개정)는 2013년 이후부터 접근할 수 있다.

〈그림 3〉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임금근로자 및 상용직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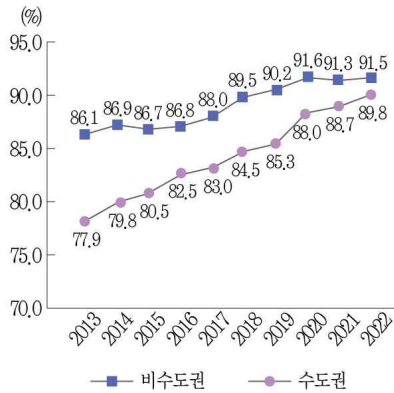
a) 임금근로자 수



b) 상용직 근로자 수



c) 상용직 비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A형)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상용직 근로자 수는 더 많지만, 임금근로자 수 증가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이를 임금근로자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임금근로자 수는 2015년 188만 5,000명에서 2022년 203만 7,000명으로 15만 2,000명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임금근로자 수는 2015년 222만 9,000명에서 2022년 204만 5,000명으로 18만 4,000명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를 증가율로 살펴보면 해당 기간 수도권 임금근로자는 연평균 1.64%씩 증가한 데 반해 비수도권은 연평균 0.12%씩 감소하였다.

이를 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상용직 근로자는 2013년 이후 증가하여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3.09%에 이르지만, 비수도권은 2015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0.47%에 머물렀다.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은 수도권의 경우 2013년 77.9%에서 2022년 89.8%로 11.9%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비수도권은 86.1%에서 91.5%로 5.6%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다.

이러한 산업인력의 이동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학력과 무관하게 임금 근로자 및 상용직 근로자 규모가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대졸 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력에서 감소하였다(〈표 1〉 참조).

수도권의 경우 증졸자인 임금근로자는 2013년 22만 6,000명에서 2022년 15만 2,000명으로 7만 5,000명(-3.93%) 감소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동 기간에 임금근로자 및 상용직 근로자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4.54%로 다른 학력군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비수도권의 대졸 이외에 모든 학력군의 근로자 숫자가 감소하였다.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는 2013년 47만 명에서 2022년 63만 명으로 13만 명(2.96%)으로 증가하지만, 이 역시 수도권의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노동시장 차이를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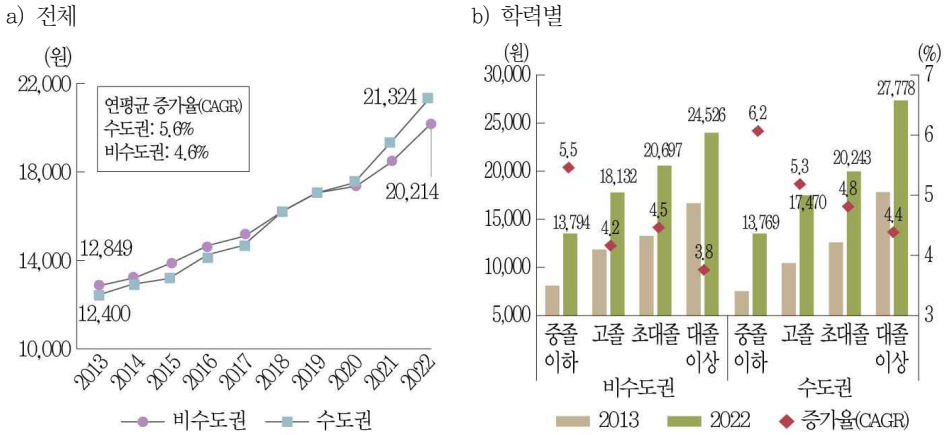
〈표 1〉 학력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및 상용직 근로자 현황

(단위: 천 명, %)

		2013년			2022년			연평균증가율(CAGR)	
		근로자 (A)	상용직 (B)	비율 (B/A)	근로자 (A)	상용직 (B)	비율 (B/A)	근로자 (A)	상용직 (B)
수도권	증졸 이하	226.4	107.3	47.4	151.6	109.7	72.4	-3.93	0.22
	고졸	817.4	600.5	73.5	859.6	737.7	85.8	0.50	2.08
	초대졸	214.2	193.0	90.1	287.4	271.5	94.5	2.98	3.47
	대졸 이상	473.9	448.0	94.5	738.9	709.7	96.1	4.54	4.71
비수도권	증졸 이하	264.8	162.7	61.4	155.2	119.2	76.8	-5.20	-3.06
	고졸	978.6	831.9	85.0	909.7	808.8	88.9	-0.73	-0.28
	초대졸	356.8	334.7	93.8	350.5	333.3	95.1	-0.18	-0.04
	대졸 이상	470.5	454.2	96.5	630.0	609.6	96.8	2.96	2.99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A형)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간당 임금 현황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A형)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지역 모두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지만, 수도권 노동시장 임금 증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고, 이러한 추이는 전 학력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이를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시간당 임금은 2013년 1만 2,400원에서 2022년 2만 1,324원으로 8,924원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5.6%였다. 반면, 비수도권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동 기간에 1만 2,849원에서 2만 214원으로 7,365원 상승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4.6%에 그쳤다. 수도권의 빠른 임금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의 시간당 임금은 2018년 이전에는 비수도권보다 낮았지만, 2018년 이후로 역전되어 2022년은 수도권 시간당 임금이 비수도권보다 높았다.

두 지역의 시간당 임금 추이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의 비수도권 시간당 임금은 전 기간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더 높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졸 이상은 수도권의 시간당 임금과 연평균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아 타 학력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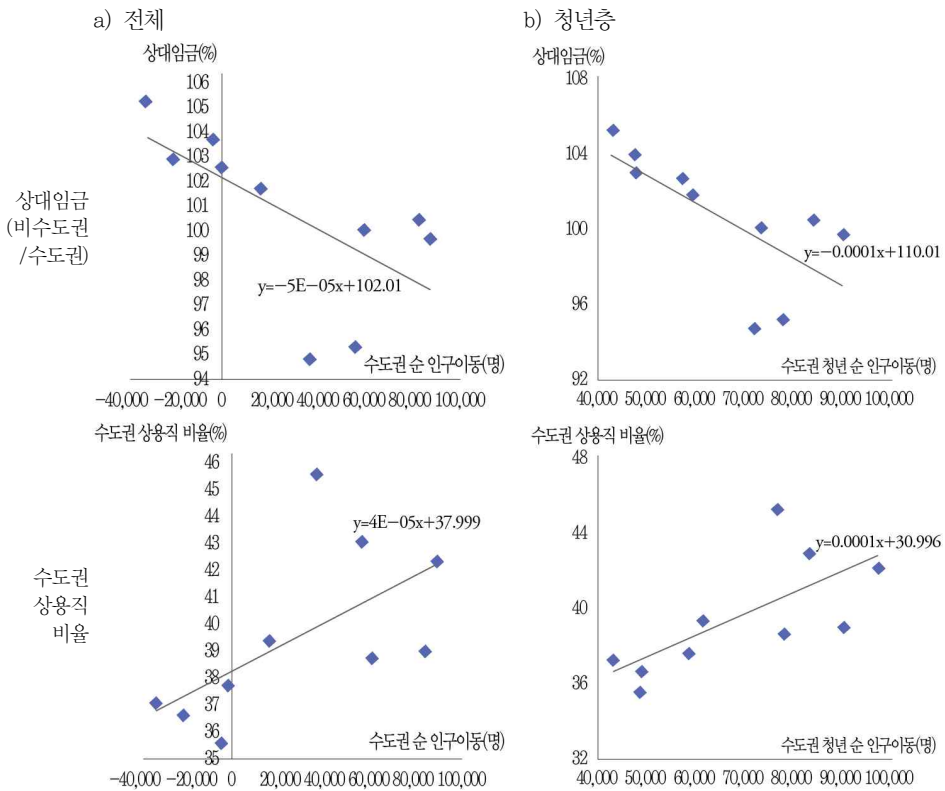
그리고 모든 학력 계층에서 수도권의 시간당 임금 연평균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임금 수준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3. 상관관계 분석

앞서 살펴본 노동시장의 성과와 연도별 수도권 인구 순 이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그림 5〉 참조). 분석에 있어 지역 간 노동시장 성과는 상대임금⁸⁾과 상용직 비율⁹⁾을 활용하였다.

수도권 순 인구이동 및 청년층 순 인구이동과 상대임금 간 상관관계는 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시간당 임금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을수록 수도권 순 인구이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상대임금 및 상용직 비율과 수도권 순 인구이동 간 관계



주: 연도별 수도권 순 인구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격차 간의 상관관계.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및 지역별고용조사(A형)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8) 상대임금=비수도권 시간당 임금/수도권 시간당 임금
 9) 상용직 비율=수도권 상용직 근로자/전체 임금근로자

고용안정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상용직 비율과 수도권 순 인구이동 간의 상관관계는 양(+)으로, 수도권의 상용직 비율이 높을수록 수도권으로 순 인구이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수도권 순 인구이동과 임금과 고용안정성 등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기존연구 결과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¹⁰⁾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는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 간 순 인구이동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노동시장 성과는 연령, 학력 등의 개별 특성, 산업 및 직업 특성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등 연도별 특성 등 다양한 조건들을 통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한계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인구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노동시장 성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IV.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산업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임금방정식을 통해 분석한다.

1. 실증분석 자료와 모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 및 추이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A형)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A형)는 17개 시도별로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연령, 학력, 종사상지위, 성별 등의 정보를 표준산업분류(10차) 및 표준직업분류(7차)에 따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록하고 있다.¹¹⁾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 및 추이 분석을 위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10) 이찬영·이흥후(2016).

11) 지역별고용조사(A형)는 2022년까지 자료 접근이 가능하지만, 2020년 이전에는 산업 및 직업중분류를 제공하지만, 이후에는 대분류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시계열 불일치 문제가 나타난다. 제조업 내 중분류 수준에서도 산업 간 이질성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을 분석기간으로 한정하였다.

$$Y_{it} = a_{it} + \beta_i X_{it} + \gamma \text{수도권더미}_{it} + \rho \text{연도더미}_t + \sigma(\text{수도권더미}_t \times \text{연도더미}_t) + \epsilon_{it} \quad (1)$$

하첨자 i 는 임금근로자, t 는 시간을 의미하며, 종속변수 Y 는 자연로그를 취한 시간당 임금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벡터(X_{it})는 연령, 연령제곱, 학력더미(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성별, 기혼 여부 등의 개별 특성과 종사상지위 더미(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산업 내 직업 중분류 더미를 포함한다.

연령변수는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을, 학력 변수는 숙련의 대리변수로서 숙련에 따른 임금 격차를, 성별 변수는 노동시장 내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를, 기혼더미 변수는 기혼자와 비기혼자 간의 임금 격차를 통제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종사상지위, 산업과 직업 더미는 고용계약 형태 및 산업과 직업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변수는 수도권더미 변수로 임금근로자가 수도권에 거주하면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연도별 이질성(물가, 경제성장률 등) 및 코로나 19로 인한 특징 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더미와 연도 간의 교호항($\text{수도권더미}_i \times \text{연도더미}_t$)을 포함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연도별 시간당 임금 격차는 기준연도 변수 계수와 교호항 계수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모델에 포함으로써 연령 및 성별 그리고 산업 간, 직업 간에 있을 수 있는 임금 차이를 통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임금 격차를 식별할 수 있다.

계수 해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더미 계수(γ)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음)이면, 수도권 임금근로자가 비수도권 임금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더 높(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의 추이는 교호항 계수(σ)를 통해서 측정되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계수값이 커지면(작아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는 기준 연도에 비해 더욱 확대(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증분석 결과

임금방정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 및 추이를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변수별로 살펴보면 연령 변수 부호는 양(+)이고, 연령제곱 변수의 부호는 음(-)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지만, 임금 증가 폭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가구주 및 기혼 여부 변수 부호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으로, 이는 남성, 가구주 그리고 기혼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별로는 고졸, 초대졸 그리고 대졸 이상 변수의 부호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이고, 계수값은 학력이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 변수인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초대졸 그리고 대졸 이상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중졸과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사상지위 변수의 부호는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으로,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연령, 연령제곱, 가구주, 기혼 여부, 학력 그리고 종사상지위 등 추정 결과는 기존연구 결과와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표 2>에서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인 수도권 더미변수는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0.011)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수도권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비수도권 근로자에 비해 1.1%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을 의미한다.

모형 2를 통해 연도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준 연도(2013년)의 교호항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0.014)의 값을 가졌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2013년에는 1.4%임을 의미한다. 이후 수도권 더미와 연도 간의 교호항 계수는 2015년과 2016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각각 -0.018, -0.019)을 가졌지만, 이를 제외한 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를 산출하면 2015년은 $-0.004(=0.014-0.018)$ 이고, 2016년은 $-0.005(=0.014-0.019)$ 로, 이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2015년에는 0.4%, 2016년에는 0.5%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시간당 임금이 2015년과 2016년에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이유 중 하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9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균형발전특

12) 김영민·정원석(2022), 김영민·정지운(2020), 김민성·강은영(2010).

〈표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 및 추이 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연령		0.032 ^{***} (0.000)	0.032 ^{***} (0.000)
연령제곱		-0.000 ^{***} (0.000)	-0.000 ^{***} (0.000)
성별(남성=1)		0.263 ^{***} (0.002)	0.263 ^{***} (0.002)
가구주 여부(가구주=1)		0.099 ^{***} (0.002)	0.099 ^{***} (0.002)
기혼 여부(기혼=1)		0.094 ^{***} (0.002)	0.094 ^{***} (0.002)
학력 (중졸 이하=1)	고졸	0.126 ^{***} (0.003)	0.126 ^{***} (0.003)
	전문대졸	0.194 ^{***} (0.003)	0.194 ^{***} (0.003)
	대졸 이상	0.268 ^{***} (0.003)	0.268 ^{***} (0.003)
종사상 지위 (상용직=1)	임시직	-0.209 ^{***} (0.003)	-0.209 ^{***} (0.003)
	일용직	-0.333 ^{***} (0.005)	-0.333 ^{***} (0.005)
수도권 더미 (기준: 2013년)		0.011 ^{***} (0.002)	0.014 ^{***} (0.004)
수도권 더미*2014			-0.004 (0.006)
수도권 더미*2015			-0.018 ^{***} (0.006)
수도권 더미*2016			-0.019 ^{***} (0.006)
수도권 더미*2017			-0.002 (0.006)
수도권 더미*2018			0.010 (0.006)
수도권 더미*2019			0.006 (0.006)
수도권 더미*2020			0.006 (0.006)
산업 및 직업더미 포함		○	○
연도더미 포함		○	○
관측치		223,356	223,356
조정된 R ²		0.531	0.531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2) *** p<0.01, ** p<0.05, * p<0.1.

3) 상수항 및 산업, 직업 및 연도더미 추정 결과는 지면 관계상 제외함.

별회계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경제 및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가 수도권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³⁾¹⁴⁾¹⁵⁾ 2017~2020년의 교호항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각 연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임금 격차가 기준 연도의 두 지역 간 임금 격차인 1.4%와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더 높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에 인력 공급이 증가함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의 국내외 투자 증가로 인한 인력수요 증가가 노동 공급 증가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⁶⁾ 그리고 비수도권 인력의 수도권 이동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의 임금 상승 효과가 투자 및 산업경쟁력 저하로 인한 비수도권 인력 수요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 효과로 인해 상쇄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 및 추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관측치 개별 특성은 학력과 무관하게 연령(+), 연령제곱(-), 성별(+), 가구주 여부(+), 기혼 여부(+), 및 종사상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경우 설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이고 계수값은 0.022이며, 이는 수도권 중졸 임금근로자가 비수도권에 비해 2.2% 시간당 임금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계층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교호항 계수는 기준 연도(2013년), 2015년과 201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수도권 중졸 임금근로자 소득이 비수도권에 비해 3.1% 더 높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의 교호항 계수는 -0.034이고, 2017년은 -0.030으로 해당 연도에서는 비수도권의

13)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013년 9조 5,000억 원, 2014년 9조 2,000억 원, 2015년 10조 1,000억 원, 2016년 9조 8,000억 원, 2017년 9조 4,000억 원 그리고 2018년 9조 8,000억 원이 투입되었다.

14) 임태경(2022)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지역경제성장 및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임.

15) 김현아·정종석·차미숙·조임근(2022).

16) 수도권은 매출액 기준 상위 1,000대 기업의 74.3%,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71개 공시 대상 기업의 83.7%가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총고정자본투자의 수도권 비중은 2013년 41.8% → 2020년 47.6%로 증가. 김영민·최준석(2022).

중졸 임금근로자가 수도권에 비해 $0.3\%(0.031 - 0.034 = -0.003)$ 를 더 높은 임금을 받고, 2017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가 $0.1\%(0.031 - 0.030 = 0.001)$ 로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교호항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항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간당 임금 격차의 크기가 기준 연도인 2013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졸학력자의 경우 수도권 더미변수의 추정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계수값은 -0.013 으로, 비수도권 고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수도권에 비해 1.3%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 고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력 및 근속이 긴 고숙련 인력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도와 수도권 교호항 계수는 기준 연도(2013년), 2015년, 2016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이고, 2018~2020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진다. 이는 기준 연도인 2013년에는 비수도권 고졸 임금근로자는 수도권의 임금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1.3% 더 높음을 의미한다. 2015년과 2016년 교호항 계수는 각각 -0.018 과 -0.019 로 비수도권 고졸 임금근로자가 수도권 임금근로자보다 2015년은 $3.1\%(= -0.013 - 0.018)$, 2016년은 $3.2\%(= -0.013 - 0.019)$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18년 교호항 계수는 0.020 , 2019년은 0.019 , 2020년은 0.022 로, 2018년에는 수도권 고졸 임금근로자는 비수도권 임금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이 $0.6\%(= -0.014 + 0.020)$ 더 높고, 2019년은 수도권 임금근로자가 $0.5\%(= -0.014 + 0.019)$, 2020년은 $0.8\%(= -0.014 + 0.022 = 0.00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고졸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18년 이후로 수도권에 비해 낮아진 다양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생산공정 내 업무를 통해 축적한 고숙련 및 경력을 갖춘 40~59세 이하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2018년 이후로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초대졸의 경우 설명변수인 수도권 더미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계수값은 0.017 로, 수도권 초대졸 임금근로자는 비수도권 임금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수도권의 교호항 계수는 기준 연도(201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계수값은 0.023 이지만, 2014년 이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 초대졸 임금근로자와 비수도권 임금근로자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3년 이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전체 고졸 임금근로자 가운데 40~59세 이하의 고숙련 및 경력을 갖춘 비수도권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3년 52.7%에서 2019년 56.2%로 증가 이후 2022년 51.1%로 감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A형)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3〉 학력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 및 추이 분석 결과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연령	0,033*** (0,001)	0,033*** (0,001)	0,026*** (0,001)	0,026*** (0,001)	0,026*** (0,002)	0,025*** (0,002)	0,044*** (0,001)	0,044*** (0,001)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성별(남성=1)	0,213*** (0,006)	0,213*** (0,006)	0,311*** (0,003)	0,311*** (0,003)	0,203*** (0,006)	0,203*** (0,006)	0,161*** (0,005)	0,161*** (0,005)	
가구주 여부 (가구주=1)	0,043*** (0,005)	0,043*** (0,005)	0,104*** (0,003)	0,104*** (0,003)	0,107*** (0,005)	0,107*** (0,005)	0,081*** (0,005)	0,080*** (0,005)	
기혼 여부 (기혼=1)	0,044*** (0,005)	0,044*** (0,005)	0,096*** (0,003)	0,096*** (0,003)	0,095*** (0,005)	0,095*** (0,005)	0,096*** (0,004)	0,096*** (0,004)	
종사상 지위 (상용직=1)	임시직	-0,155*** (0,005)	-0,156*** (0,005)	-0,212*** (0,004)	-0,212*** (0,004)	-0,263*** (0,009)	-0,263*** (0,009)	-0,289*** (0,010)	-0,289*** (0,010)
	일용직	-0,291*** (0,007)	-0,291*** (0,007)	-0,337*** (0,007)	-0,337*** (0,007)	-0,457*** (0,022)	-0,456*** (0,022)	-0,359*** (0,024)	-0,358*** (0,024)
수도권 터미 (기준: 2013년)	0,022*** (0,005)	0,031*** (0,011)	-0,013*** (0,002)	-0,014** (0,006)	0,017*** (0,004)	0,023** (0,011)	0,053*** (0,003)	0,050*** (0,009)	
수도권 터미*2014		-0,013 (0,015)		-0,005 (0,009)		0,008 (0,016)		0,004 (0,013)	
수도권 터미*2015		-0,034** (0,015)		-0,018** (0,009)		-0,018 (0,016)		-0,007 (0,013)	
수도권 터미*2016		-0,023 (0,016)		-0,019** (0,009)		-0,017 (0,016)		-0,009 (0,013)	
수도권 터미*2017		-0,030* (0,016)		0,001 (0,009)		0,003 (0,016)		0,010 (0,012)	
수도권 터미*2018		0,023 (0,016)		0,020** (0,009)		0,003 (0,016)		0,007 (0,012)	
수도권 터미*2019		0,005 (0,016)		0,019** (0,009)		-0,015 (0,016)		0,012 (0,013)	
수도권 터미*2020		0,011 (0,017)		0,022** (0,009)		-0,010 (0,016)		0,004 (0,013)	
산업 및 직업터미 포함	○	○	○	○	○	○	○	○	
연도터미 포함	○	○	○	○	○	○	○	○	
상수항	10,612*** (0,190)	10,612*** (0,190)	9,408*** (0,082)	9,407*** (0,082)	9,811*** (0,168)	9,811*** (0,168)	8,873*** (0,047)	8,874*** (0,047)	
관측치	30,369	30,369	107,699	107,699	32,997	32,997	52,291	52,291	
조정된 R ²	0,456	0,454	0,450	0,450	0,416	0,414	0,445	0,444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2) *** p<0,01, ** p<0,05, * p<0,1
 3) 산업, 직업 및 연도터미 추정 결과는 지면 관계상 제외함.

대출 이상자의 수도권 더미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계수값은 0.053으로 수도권 대출 임금근로자는 비수도권 임금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5.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와 수도권더미 교호항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 연도(2013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0.050)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대출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비수도권 근로자보다 2013년에는 5% 더 높았고, 이후 양자 간 격차는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동일 학력의 임금근로자 간에도 존재하고,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시간당 임금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수도권은 대출 이상 고숙련자에 대한 인력 수요 증가가 인력 공급 증가보다 더 빠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¹⁸⁾

V. 결론

수도권의 경제, 문화, 사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확대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수급은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지역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지역산업인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로 인해, 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지역산업에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산업인력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산업인력정책 수립 시 임금 및 고용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비취업자(학생, 실업자 등)는 노동시장 진입 시 임금 수준, 기업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한다. 데이터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

18)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및 나노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2019년 기준 77.7%임.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권 간 임금 격차는 동일한 산업, 직업 및 학력에서도 수도권 임금근로자가 비수도권 근로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구직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임금을 제공하는 기업을 찾지 못해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부산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부산에서 직장을 잡고 싶다고 응답하였지만 설문에 응한 부산지역 기업의 62%는 부산지역의 청년을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응답하였다.¹⁹⁾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기대하는 임금 수준의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산업인력정책 수립 시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과 함께 양성된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동시장에 유인하는 방법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로 지역산업인력정책 수립 시, 양성된 인력이 지역노동시장 진입 시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근로조건 개선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 주거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양성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대졸 이상 고학력 인력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 격차는 타 학력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 비수도권의 고학력 인력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유인이 더 크다. 따라서 지역은 디지털전환 및 지역산업 고도화에 요구되는 고숙련 인력의 수급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졸 이상 고학력 인력은 앞서 언급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은 소득(연봉) 조건 등으로 인해 지원받기 어렵다. 실제로 반도체산업의 3년 차 연봉은 2019년 기준으로 4,003만 원으로,²⁰⁾ 지방에서 배출된 반도체 인력은 앞서 언급한 정책 지원의 소득 조건을 넘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고학력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한 계약학과를 통해 학기 중에는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졸업 이후 지역산업체에 취업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인건비 지원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통한 주거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원책 등을 통해 수도권의 고학력 인력 풀림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인재 공급이 선순환을 유도할

19) 부산상공회의소(2022).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0).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육을 수도권에서 받은 인력이 중등교육을 마친 지역으로 취업하고자 할 때 지역대학 졸업자와 유사한 지원을 하여 지역을 떠난 인재를 다시 유인하는 방안 역시 정책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수도권과 지방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고 인력의 수도권으로 이동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한계 또한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임금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사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그러한 임금의 차이가 인력의 이동을 일으킨다는 명시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다. 또한 생활 여건, 산업별 요인, 직업만족도, 경력 발전기회 및 임금 혜택 등 직업 선택 및 거주 이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정책대안이 실제로 인력의 지방으로의 이동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은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력의 수도권으로 이동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지역 간 임금 수준 격차가 동일한 산업 내에도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학력이 높을수록 더 크며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였으며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은택·마광래(2012),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189호, 33~43.
- 교육부(2022),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이 될 100만 인재를 양성합니다,” 8월 22일 보도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20),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시도 발전시행계획』.
- 김리영·양광식(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제3호, 1~20.
- 김민성·강은영(2010), “무역이 학력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대중국 수출을

-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31~49.
- 김영민(2022),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 분석과 산업인력정책 시사점,” 『KIET산업경제』 1월호.
- 김영민·정지운(2020), “최저임금이 산업별 임금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 제38권 제4호, 95~120.
- 김영민·조재한(2020), “산업생산활동과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14권 제2호, 99~119.
- 김영민·정원석(2022), “산업기술인력 임금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40권 제4호, 87~108.
- 김영민·최준석(2022),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정책 과제,”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30호.
- 김원규·김진웅(2015), “산업기술인력 부족의 영향 및 원인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규모별 제조기업에 대한 실증연구,” 『산업혁신연구』 제31권 제3호, 151~181.
- 김지수·변창욱·최윤기·배진원·최준석(2021), 『지방투자에 따른 지역 생산성 변화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2021-10, 산업연구원.
- 김현아(2013), “시도 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재정포럼』 제203권, 23~38.
- 김현아·정종석·차미숙·조임곤(2022),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일반·지방재정 분야.
- 김현우·이두현(2021),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성장의 동태적 특징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1권 제12호, 310~321.
- 박성익·류장수·조장식·김종한(2015),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산업혁신연구』 제31권 제3호, 183~208.
- 산업통상자원부(2023a), “지방정부-중앙정부 하나되어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 3월 27일 보도자료.
- _____(2023b),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8월 1일 보도자료.
- 이중현·이재은(2020), “국내 이직 관련 질적 연구 및 빅데이터 연구에서 나타난 이직 선행요인에 대한 종합적 검증,” 『Journal of The Korea Data Analysis Society』 제22권 제5호, 2075~2093.
- 이찬영·문제철(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6호, 2239~2266.
- 이찬영·이흥후(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

- 제연구』 제34권 제4호, 143~169.
- 엄미정·박재민(2007), “산업기술인력 부족의 결정요인 분석,” 『기술혁신연구』 제15권 제2호, 25~40.
- 오승환·정성문·박재민(2016), “산업기술인력의 부족과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생산성논집』 제30권 제1호, 53~73.
- 임태경(202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233~254.
- 조장식·강창원·최승배(2020), “2단계 회귀모형을 활용한 이직 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31권 제1호, 75~83.
- KOSME 이슈포커스(2021), “「지역혁신성장 동력 발굴 中企 설문 결과」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이슈포커스』 2021-6호.
- 홍성호·유수영(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1호, 1~19.
- 황광훈(2020), “첫 일자리 이탈 영향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43권 제2호, 41~74.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17.do>(접속일: 2023년 8월 10일).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MZ세대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인식 조사(2022년).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 _____, 기업활동조사(2019년).
- _____, 사회조사(2021년).
- _____, 인구조사(2022년).
- _____, 주민등록인구동향, 각 연도.
- _____, 지역별고용조사(A형), 각 연도.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youthjob/screen.do>(접속일: 2023년 8월 10일).

[Abstract]

Analysis between Regional Industry Labor Supply and Wage Gaps

Youngmin Kim* · Wonsuk Chung**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ensure the smooth supply of labor for local industries, but the difficulty of labor supply in non-metropolitan areas has not improved. This study analyzes the wage gap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finds that workers in metropolitan areas earn higher wages than worker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this feature is even more pronounced among the highly educated cohort with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This suggests the need for policies that provide economic incentives to attract workers trained through regional industrial workforce policies to enter the regional industry.

Keywords: regional workforce policy, smooth demand and supply of labor, wage difference by region, wage gap by educati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JEL Classification: I2, J3, J6, L6

* First Auth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Tel: +82-44-287-3103, E-mail: kym2060@kiet.re.kr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Dong-A University, Tel: +82-51-200-8637, E-mail: wonsuk@dau.ac.kr